

**201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것인가?**

- 일시 2017년 4월 21일 (금) 오전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학영 국회의원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튼21빌딩 413호
전화 02-761-7778 팩스 02-784-7778 이메일 green@ctvkorea.com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것인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경제와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개혁과 기업지원책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성공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지지를 받으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와 자기보호에 취약한 소비자의 실패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함께 모색되지 않으면 우리의 금융시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 구성될 정부는 과연 이같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각 정당의 금융소비자 공약을 살펴보고 소비자운동 그룹의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환 조연행 양금숙 황선옥

- 일시 2017년 4월 21일 (금) 오전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이학영 국회의원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제1 정당별 금융소비자정책 비교평가

조운미 대표

(C&I소비자연구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발제2 소비자중심 금융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조연행 대표 (금융소비자연맹)

■ 지정토론

좌장 이성환 (변호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은경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숙 실장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천규승 이사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김보금 소장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김준하 사무처장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발제1

2017 대선 정당별 금융정책 평가

조 윤 미

(C&I소비자연구소/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7 대선

정당별 금융정책 평가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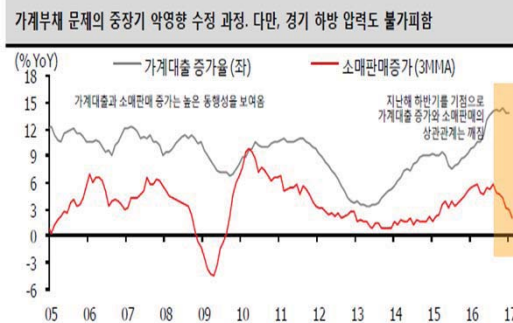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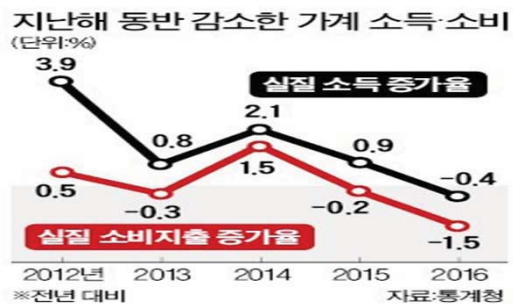
1. 2017년 역사상 첫 보궐 대선 - 장미대선과 고통스러운 가계상황

- ❖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와 소비절벽
- ❖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
- ❖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
- ❖ IT 기술발전과 금융서비스 환경 변화
 -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이슈 증가
 - 계층간 정보격차 발생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절벽

- 2016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0.6%증가에 그침 (2003년 이후 처음으로 0%대 기록)
-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계 월평균 실질은 -0.4%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1.5%) 이후 처음 마이너스 기록 !)



가계부채

- 지난 2014년 이후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
- 2016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 GDP 대비 8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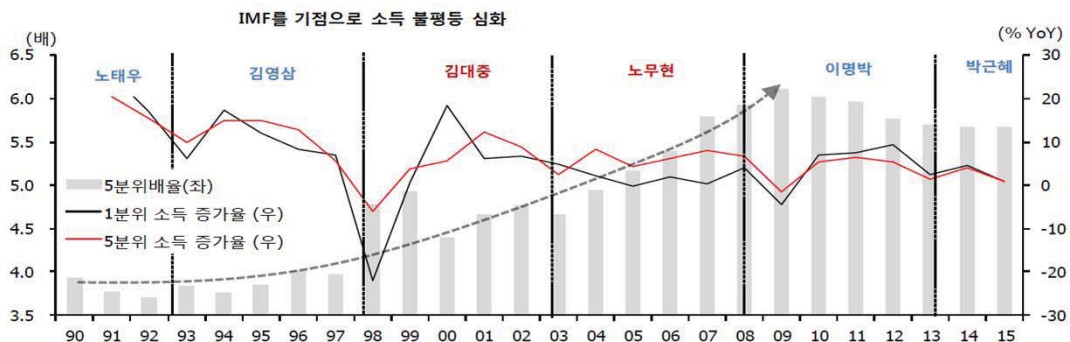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 IMF 이후, 신 자유주의 본격화와 더불어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 IMF 이전 소득 계층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5분위 소득 / 1분위 소득)은 대략 4배 수준에서 형성
이후 10년간 소득 5분위 배율은 6배 수준까지 크게 상승 (대략 50%)
 - 핵심이유는 IMF 당시 5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소득 하락폭이 훨씬 컸고, 01년 ~ 09년까지 5분위 소득 증가율이 1분위 소득 증가율을 꾸준히 앞섰기 때문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1990년 이후 소득 5분위 배율 (5분위 소득 / 1분위 소득)과 연간 소득 증가율



자료 : 통계청, SK증권

➤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이슈 역시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IT기술발전과 금융서비스환경 변화

- 핀테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증가
 - 정보취약계층의 기술접근성 / 위기관리 능력 부족
 - 새로운 기술 활용도 떨어지고, 피해 가능성 높음
- 기업과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증가
 - 약탈적 금융에 희생가능성 증가
 - 소비자를 지원하는 공공기능 대폭 강화 필요 (금융주치의제?)

2. 정당별 핵심 정책방향



-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 부자증세 재원으로 복지강화

-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 긴축재정, 선별적 복지
 - 기업규제 완화

- 국민이 이긴다!
 - 기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작은정부
 - 산업구조 개혁, 시장자유성 확대

- 지지율10%이상 후보



문제인	홍준표	안철수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추가 인하는 어려운 상황 - 안정적인 환율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인상하기 힘든 상태
재정정책 (세제) (J 노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지난해 편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인데 이를 두 배인 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일자리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안 전면적 검토 	(긴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지사 재직시, 긴축재정으로 채무 감축적자 재정을 흑자 전환 ex)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ex)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조세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개혁 방향은 세목선택 문제라기보다 경쟁력이 높은 고 수익자와 대기업이 좀 더 부담 -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반영 - 부가가치세 변경 계획 無
부동산 / 가계부채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 이하 유지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조원 대의 공적 자원 투입 -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10조원을 투입할 것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확대로 연 5만 가구씩 (주택담보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의 중성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정비 (가계부채의 연착륙 기초 방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의 증가를 둔화와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의 증진에 힘쓸 것
복지정책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그 외 복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 보조금 체제로 개편 - 영유아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제공 	(보편적 복지 지향, 선별적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 -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초중고 학습시기, 교육복지 카드 지급 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울 것 -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원 (보편적, 선별적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모두가 대상인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 병행할 것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으로 적극 인상할 것

문제인	홍준표	안철수
외교/국방 정책 (TTHAD) (국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3% 증액 해 대량 증정 보복 조기 구축 (사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드 배치, 자기 정부서 논의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08.04 "사드 배치 결정 불가피한 선택" - 2017.03.02 "사드 배치 제공한 뜻대에 경의" - 2017.03.31 "사드 배치 실효성 없다, 핵보유 강조" 	(국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연구개발 예산 20% 증가 - 국방비 GDP 2.4%→3% 증액 (사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드 배치는 이미 서명하에 합의가 되어 찬성함
구조조정 (해양 조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을 유지해야 함. 		(조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부론 조선소 폐쇄는 잘못된 판단. - 국민의 당은 정부부처와 현대중공업에 상대로 군산 조선소 폐쇄 철회를 요구 할 것을 결의했으며 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4차 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IoT, 신 재생 에너지 위주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혁명의 기조에 맞춰 산업구조 개혁 - 공정한 제도와 정책 속에서 경쟁 유도 -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 부여 후 정부는 지원만 할 것
기업 관련 정책 (중소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 R&D 예산,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 - 신 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기업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의 기본은 기업 기(氣) 살리기" - 기업 규제를 완화해(시장경제 추구) 수백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사내 보유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 할 것 - 법인세 인상 반대 (U턴 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해외 생산기지 U턴을 위한 지원 확대 	(공정성장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 촉진 - 공정한 분배를 통한 선순환 구축 (임금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율 80% 수준까지 향상 - 유망한 중소기업 직원에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내수 관련 정책 (가계소득 증진을 위한 통신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기본료 폐지 -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김영란법 개정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는다" 	(통신업 관련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 제 4 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늘릴 것

3. 금융소비자 관련 공약

- ❖ 금융관련 정책 체계적으로 제시 - 정의당
- ❖ 가계부채 대책으로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공약 일부 제시
- 더불어민주당
- ❖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구체성 결여 - 국민의당
- ❖ 3개 정당 모두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약속
-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구체내용 없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	찬성	찬성	부분찬성	찬성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기타(금산분리 원론)	반대	반대	반대
인터넷은행 도입 위한 온산분리 완화	기타(금산분리 원론)	찬성	기타(조건부 허용)	반대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상가임대차보호법 확대	찬성	찬성	기타(사실상 반대)	찬성
중세 필요성	원론적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법인세 인상	기타(유보)	찬성	찬성	찬성
가계부채 총량규제	기타(총량관리제 도입)	반대	찬성	찬성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찬성	찬성	기타(취약차주에 대한 개인별 구조조정)	찬성
뉴스테이 사업	조건부 반대	기타(주택시장 공공: 기관·민간 재구조화)	기타(준공공형 뉴스테이 추가)	반대
공공 임대주택 확충	매년 15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5.8→8%	기존 도심임대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	매년 15만호 이상 반값 임대주택 공급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공공 임대주택 확충	매년 15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5.8→8%	기존 도심임대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	매년 15만호 이상 반값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상한제	단계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LTV·DTI 규제	기타(비소구 주담대 확대 등)	기타(신중 검토)	반대	찬성
분양가 상한제	기타(시장상황 감안해 검토)	기타(신중 검토)	찬성	찬성
분양원가공개	기타(시장상황 감안해 검토)	기타(신중 검토)	찬성	찬성
주택분양제도 개선안	인센티브 제공으로 후분양제 유도	후분양제 신중 도입	없음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취약계층 주거복지	영구임대·매입임대는 저소득 홀몸노인·장애인 우선제공	주택바우처 확대, 공공 임대료 소득 연계 등	도심 빈집, 노후주택 개량해 청년에 공급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60%로 확대

호주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공약집 및 이적 발언을 참조해 작성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		○
안심전환대출 확대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		
이자총액 제한			○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		○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채무자 대리인 선임 허용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
도민 은행 설립			○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임대차보호법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제시**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 이하 유지
- 이자율 상한 25%,(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
 - 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 명, 11.6조원 채무 감면

- 떠돌이 장기 연채 채권 (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 당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 (단기 변동금리 일시 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 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 구상권의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하는 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서민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

- 1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
- 2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및 담보대출 개선
- 3 연대보증 개선과 시민단체 채무 대리인 선임 가능
- 4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
- 5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역금융 활성화”

- 6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사모·헤지 펀드 규제 강화
- 8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확대

-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을 확대해 연 5만 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릴 것.

•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

-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서 제 2금융권으로, 개별대출에서 집단대출로 이리 저리 옮겨가며 커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박근혜 정권에서 무분별하게 풀어놓은 DTI와 LTV도 이제 정상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

•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

- 노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큼
-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고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서히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결론

- ❖ 대체적으로 의지는 있으나 구체성 약하다는 평가
- ❖ 금융소비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함
- ❖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구성 소비자중심 시장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 ❖ 채무자 보다는 채권기관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비자중심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新정부 금융정책

조 연 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소비자중심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新정부 금융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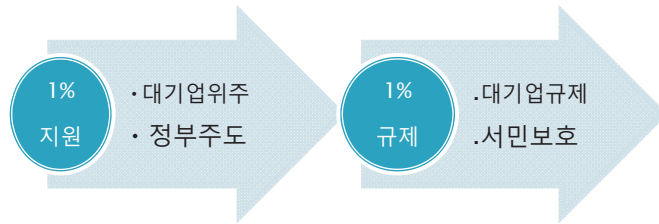
2017.04.21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

순서

- I. 현 황
- II. 방 향
- III. 목 표
- IV. 과 제
- V. 효 과

I. 현 황



-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 심화 금융
- '가진자' 만 유리한 금융
- 중소서민, 저신용자 악순환 금융
- 실패한 서민금융 정책
- 서민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금융

II. 방 향



- 1% 금융 → 99% , 일자리 금융
- 규제 혁파 → 시장 경쟁, 자율 금융

II. 방향

99% 서민을 위한 금융

➤ 소비자위주 금융 정책

대기업, 공급자위주의 금융에서 중소서민 소비자 위주의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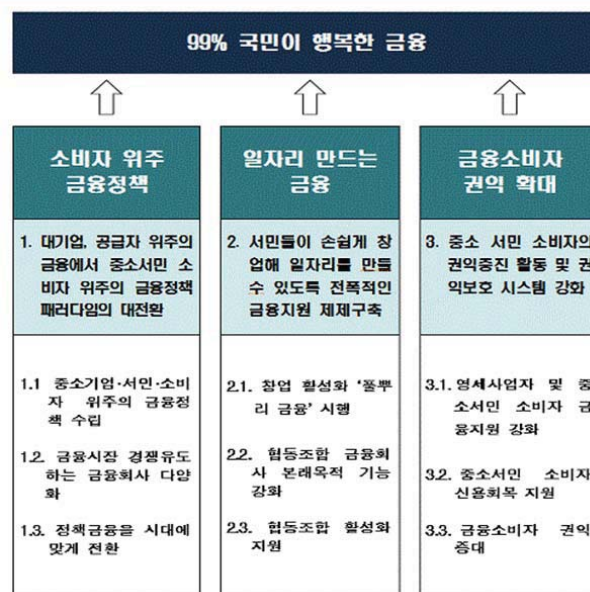
➤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

서민들이 손쉽게 창업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금융

➤ 99% 서민들을 위한 금융

중소서민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III. 목표



III. 목 표

- 소비자위주 금융 정책
- 일자리 만드는 금융
-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III. 목 표

➤ 소비자위주 금융 정책

1. 중소기업, 서민,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2. 금융시장 경쟁 유도하는 금융회사의 다양화
3.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

Ⅲ. 목 표

➤ 일자리 만드는 금융

1. 창업 활성화 ‘플뿌리’ 금융 시행
2. 협동조합 금융회사 본래목적 기능 강화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Ⅲ. 목 표

➤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1. 영세사업자 및 중소서민 소비자 신용회복지원
2. 중소서민 소비자 신용회복지원
3. 금융소비자 권익증대

IV. 과 제 1. 소비자위주 금융 정책

➤ 중소기업, 서민,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 가.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전환
- 나. 금융관련 기관 합목적적 운영
- 다. 금융관련위원회 서민소비자 과반이상 선임
- 라. 국민, 중소기업은행 설립목적으로 복귀

IV. 과 제 1. 소비자위주 금융 정책

➤ 금융시장 경쟁유도하는 금융기관 다양화

- 가. 금융회사 규제완화 활성화
- 나. 소비자중심 신용평가사 설립
- 다.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보험회사 설립
- 라. 중소서민 보증보험회사 설립 복수화
- 마. 금융회사 진입과 퇴출 활성화
- 바. 지역 밀착 금융기관 육성

IV. 과 제 1. 소비자위주 금융 정책

➤ 정부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

가. 영세서민, 소비자위주의 정책금융

나. 사회적 금융의 확대 강화

다. 농수산업 정책자금 4,5차산업으로 전환

IV. 과 제 2. 일자리 만드는 금융

➤ 창업 활성화 ‘풀뿌리 금융’ 시행

가. 생계형 창업 금융지원 강화

나. 사업체 담보 창업자금 지원(신용대출)

다. 영세사업자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라. 중소서민 신용평가방식 전문화, 개선

마. 마이크로 파이낸스 확대

바.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IV. 과 제 2. 일자리 만드는 금융

➤ 협동조합 금융회사 본래목적 기능강화

- 가. 농협은행, 농협보험사 본래 목적대로 환원, 운영
- 나. 신용협동조합 본래 목적운영 활성화
- 다. 저축은행 신용조합으로의 전환, 운영
- 라. 협동조합 금융기관 세제지원 강화

IV. 과 제 2. 일자리 만드는 금융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활성화 지원
- 나. 협동조합 자체 금융사업 허용
-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금융사업 허가
- 라. 중소, 영세 소비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IV. 과 제 3.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권익확대

➤ 영세 사업자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강화

- 가. 서민금융지원 정책 강화
- 나.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역할 재정립
- 다. 영세사업자 직접금융 자금조달 확대
- 라. 벤처캐피탈 확대

IV. 과 제 3.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권익확대

➤ 중소기업 소비자 신용회복지원

- 가. 금융배제자 금융포용 정책 추진
- 나.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 다. 개인회생, 파산제도 효율적 개선
- 라. 중소기업 부채탕감 방법 강구

Ⅳ. 과 제 3.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권익확대

➤ 금융소비자 권익증대

가.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

나. 소비자분쟁조정원 설립

다. 소비자권익 3법 제정

* 집단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입증책임의 전환

라. 금융소비자단체 운영 강화 지원

V. 효 과

➤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 부익부, 빈익빈 완화로 중소기업 생활 안정

➤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영세서민을 파듯하게

➤ 사회적 약자 해소

Q & A

감사합니다!

I. 금융정책의 현황

□ 불평등 심화시키는 금융

금융은 경제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는 혈맥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은 ‘가진 자’와 ‘대기업’위주로 흘러,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는 ‘혈맥’이 잘 흐르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 1% 가진자들을 위한 금융

금융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융통받는 자의 신용에 따라 융통 여부와 이자율(가산금리)이 결정되는데, 1%의 가진 자는 융통에 문제가 없지만 99%의 중소서민 소비자들은 ‘융통’ 자체가 어려움.

- 대기업 및 중산층 : 신용위주 저렴한 이자로 거액 자금 융통
- 중소기업 및 영세서민 : 담보위주 고이율 자금조달 어려움

□ 실패한 서민금융 정책

IMF이후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을 확대했지만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화되고, 서민, 저신용자들은 사업 및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등 저신용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연소득 2.6천만원이하의 서민들에 대한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은 대부분 소비성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 됨.

◇ MB노믹스의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 정책은 대기업 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킴.

- 2015년 IMF는 낙수효과 사망선고 함. 오히려 역수(逆水)효과 작용, 상위 20% 소득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하위 20%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

◇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종액출자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 법인세조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하도급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 권리 강화, SSM규제, 금산분리(은행법)등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대기업은 여전히 여유자금이 풍부하나,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빚에 쪼들리는 현상이 지속되어 탈출구는 없어 보임.

◇ 이전 정권은 최근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정책(낙수효과)과 경제민주화에 바탕을 둔 대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경제 정책을 펼쳤으나, 실패를 거듭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살기 팍팍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빚에 쪼들려 살기 어려웠음.

□ 서민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금융

국민 대다수의 중소기업 소비자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자금유통이 어려워 창업으로 사업체를 만들 수 없어 경제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정부나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중소기업들은 그 속에 들어가 일자리를 채우는 기계부속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정부나 대기업만 바라보는 현재의 나약한 중소기업 정책이 과거와 현재 정부의 공급자위주의 ‘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이었음.

이러한 구조속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생길 수 가 없음. 대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를 해도,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생존발전에 충분한 자생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체는 그렇지 않고 생존조차 불투명하고 힘겨움.

이제까지의 중소서민 금융정책은 채무과다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등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호하는 차원에서의 시혜성 금융정책의 대상으로만 인식했지 서민을 금융의 주체로서 대우하지 않았음.

II. 금융정책의 방향

新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은 ‘가진 자’들에게만 돈이 흐르는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없는 자’ 중소서민에게도 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함.

중소 서민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서민들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부를 창출 축적하여 99%의 중소서민들이 잘사는 금융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임.

[신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

국민 경제구조가 튼튼한 국가는 대기업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풀뿌리처럼 국가 저변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함.

중소서민도 금융의 자금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여,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스스로 창출하고 축적하여 99%의 중소기업이 행복하게 잘사는 금융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임.

□ 99% 서민들을 위한 금융

결론적으로 돈이 1% 대기업 가진 자에게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흐르는 혈액처럼 99%의 중소기업 소비자에게도 흘러들어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임.

Ⅲ. 금융정책의 목표

신 정부의 소비자중심 금융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제안함.

□ 서민·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소비자위주의 금융정책은 중소기업·서민·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수립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금융회사를 다양화시키고 성과 없이 투자되는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시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핵심전략임.

□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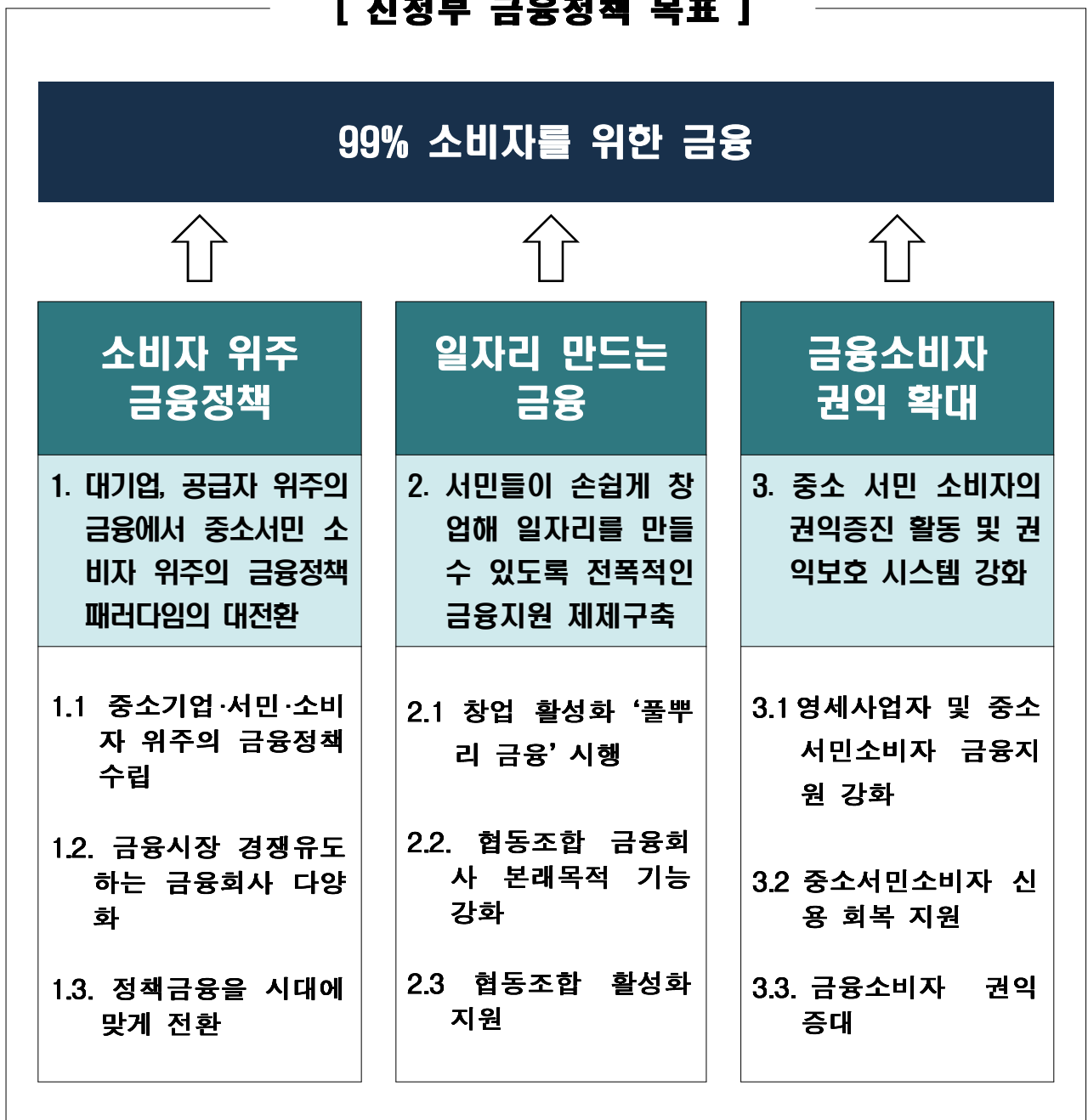
일자리 만드는 금융은 창업을 활성화 시켜 풀뿌리 금융을 실행하고, 현재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협동조합 금융회사를 본래 목적에 맞도록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 이름 뿐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협동조

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사업을 허가하는 등의 지원책을 펼쳐야 함

□ 소비자권익확보 금융정책

중소서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비자 금융지원 강화시키고, 중소기업 소비자 신용회복 지원,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금융소비자 권익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신정부 금융정책 목표]



Ⅳ. 금융정책 중점추진 과제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각 정책 목표별 핵심전략을 3개씩 나누어 수행하고 중점과제를 39개로 나누어 제안함.

[금융정책 중점추진 과제]

정책목표 (3)	핵심전략(9)	중점과제(39)
1.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1.1 중소기업·서민·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전환 ○ 금융관련기관의 합목적적 운영 ○ 금융관련 위원회의 서민소비자 과반 선임 ○ 국민·농협·중소기업은행의 설립 목적 복귀
	1.2. 금융시장 경쟁 유도하는 금융회사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규제완화 ○ 소비자중심 신용평가사 설립 ○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보험회사 설립 ○ 중소기업 보증보험회사 설립 ○ 금융회사 진입·퇴출 활성화 ○ 지역밀착 금융기관 육성
	1.3.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서민·소비자위주의 정책금융 ○ 사회적 금융의 확대 강화 ○ 농수산정책자금 4,5차산업으로 전환
2. 일자리·일자리 만드는 금융	2.1. 창업 활성화 ‘폴뿌리 금융’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창업 금융지원 강화 ○ 사업체 담보 창업자금 지원 ○ 영세사업자 창업·경영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신용평가방식 획기적 개선 ○ 마이크로 파이낸싱 확대 ○ 크라우드 펀딩 확대 및 활성화

	2.2. 협동조합 금 융 회 사 본 래 목 적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원 기능강화 ○ 농협 은행·생보·손보 본래 목적대로 환원·운영 ○ 지역밀착 서민금융 역할 강화 ○ 금융협동조합 세제지원 강화
	2.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활성화 금융지원 ○ 협동조합 금융사업 허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일거리·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3. 중소 서 민, 소 비 자 권 익확대	3.1. 영세사업 자 및 중 소서민 소 비자 금융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지원 정책 강화 ○ 신보와 기보 통합, 역할 재정립 ○ 중소기업자 직접금융 자금조달 지원 ○ 벤처캐피탈 확대
	3.2. 중소서민 소비자 신 용회복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배제자 금융포용 정책 추진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 개인회생, 파산제도 효율적 개선 ○ 중소서민 부채탕감 정책 시행
	3.3. 금융소비 자 권 익 증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 ○ 소비자권익 3법 제정 ○ 금융옴부즈맨제도 도입 ○ 금융소비자단체 운영 지원 강화

1

소비자위주의 금융정책

1-1. 중소서민위주의 금융정책

□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전환

지금까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입장이 매우 소외되어 왔음.

정부가 하는 대로 말없는 다수는 정부의 정책에 말없이 그대로 따라왔고, 정부의 정책은 늘 금융산업의 보호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앞서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가 감당해 온 것임.

이제부터는 강력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필요함.

기업이 고객만족 또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금융산업도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함.

똑똑한 소비자가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듯 금융소비자의 입장 반영은 금융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이제는 모든 법과 제도의 수립 시에는 소비자가 우선시 되는 소비자중심의 정책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사 인수를 금지시키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소비자위주로 바꾸어 나가야 함.

이제는 금융산업의 보호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대기업만이 금융회사를 허용하는 것을 중소기업 소비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대기업 위주에서 획기적 전환하여 다양한 형태, 다양한 금융회사가 설립되도록 규제를 대폭 바꾸어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관련 법과 제도, 시스템을

소비자위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임.

□ 금융관련기관의 합목적적 운영

금융통화위원을 본래 입법의도 및 목적대로 임명 운영토록 제도화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측 대표도 선임되도록 의무화시켜야 함.

□ 금융관련 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과반이상 선임

금융위원회 등 관련 모든 위원회 중소서민 소비자 성향의 대표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함.

□ 국민·농협·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 복귀

중소서민과 농민,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으로 전업화시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함.

1-2. 금융시장 경쟁 유도 금융회사 다양화

□ 금융회사 설립규제 완화

소비자의 이익 및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터넷뱅크 조기 활성화 및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인터넷, 모바일의 발전에 따른 손쉬운 금융서비스 제공토록 기존 금융회사만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창의적인 신규모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토록 함.

기존 금융회사가 할 수 없는 틈새시장 개척 활성화시키며 타업종 진출 사업모델의 다양성을 추구함. 이를 위해 진입규제완화로 다양한 핀테크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P2P대출을 활성화하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직접 대출하는 PeertoPeer Lending을 지원함.

☐ 소비자중심 신용평가사 설립

현재의 평가시스템이 아닌 자영업자, 영세민 기준으로 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전문적인 신용평가사를 설립 운영토록 지원함.

☐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보험회사 설립

현재 보험업법에만 있고 형해화 되어 있는 상호보험회사를 도입하여 주주 이익을 위한 주식회사만의 시장에 자유시장 경쟁을 유도함.

보험회사의 독과점적 불공정 담합행위를 견제하고 소비자(계약자)가 주인 회사의 경쟁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중소서민 보증보험회사 설립

현재 1개의 회사에서 경쟁 체제 구축함

☐ 금융회사 진입 · 퇴출 활성화

경쟁에서 패한 금융회사의 시장에서 퇴로 확보하여 자유롭게 퇴출시키고,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 소비자들도 금융회사를 설립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함.

☐ 지역밀착 금융기관 활성화

지역밀착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자금의 33.3%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 것을 해당 지역에 더 많이 투여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

1-3. 정부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

☐ 영세 서민 · 소비자 위주의 정책금융

산업 위주가 아닌 소기업, 사업자 창업 등 일자리 위주의 정책금융을 펼치도록 한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전에 따른 손쉬운 금융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지원함.

□ 사회적 금융의 확대 강화

사회적 금융재단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 NGO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납세자의 지정에 의한 소득세의 1%를 NGO에 지원하는 1%(퍼센트법) 법률을 제정함

□ 농수산물정책자금 4,5차산업으로 전환

농수산물 및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물꼬를 시대에 맞게 농수산업과 융합한 산업이나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중소서민의 창업자금, 서비스산업 등 4,5차 산업으로 흐르게 함.

4차산업이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하며, 5차산업이란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을 말함. 1차 농수산업과 연계한 5차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 체험형 관광, 숙박, 여행산업 등을 육성 지원함

2 일거리 · 일자리 만드는 금융

2-1. 창업 활성화 '풀뿌리 금융'시행

□ 생계형 창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가게, 식당, 푸드트럭 등) 지원하고, 중소서민 일거리 창출과 가족 및 친인척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사업체 담보 창업자금 지원

신용이 없어도 사업체를 담보로 창업자금 지원하여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창출되는 운영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신용대출 시스템을 만든다.

□ 영세사업자 창업,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창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시스템 개발 운영하여 풀뿌리 경제가 살아남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영, 금융, 회계, 관리 등 전반을 인큐베이팅 지원한다.

□ 중소기업 신용평가방식 획기적 개선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방식을 전문화시켜 별도로 만들거나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적용함.

□ 마이크로 파이낸싱 확대

Microfinance는 주요 금융 기관에서 신용과 담보가 없어 대출받을 수 없는 가난한 계층에 5~6명을 묶어서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서비스이다. microfinance는 가난한 사람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을 대체할 만한 필요에 의해 탄생함. Microfinance 담당기관을 MFI(Microfinancing Institute)라 하고 하는데, NGO, 마을 은행, 저축 및 대출 조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크라우드 펀딩 확대 및 활성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들에 의한 SNS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임.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하는데 유용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이 부족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투자 혹은 기부를 하는 방식임. 기부형, 후원형, 지분투자형, 대출

형 4종류로 나뉘

2-2. 협동조합 금융회사 본래목적 기능강화

□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금융지원 강화

지역금융 지원기능, 컨설팅 기능, 중소기업 금융기능, 중소기업 재생지원 기능, 생활기반 지원기능 등 지역밀착 중소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소, 영세, 소비자 대상 협동조합 금융기관 신설 운영토록 함.

소규모 창업금융지원기능(신용 및 사업체 담보)과 기존 조직이 취급하지 않는 담보 없는 영세서민 창업 지원, 서민 소비자 소액 대출 서비스 등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활성화시켜야 함.

관계형 금융의 대출은 재무데이터, 신용평점, 자산담보 위주의 대출이 아닌, 정성적 정보와 매출 등 거래정보를 기초로 대출을 실시함.

손쉽게 소규모 창업금융 조달(신용 및 사업체 담보)하거나 담보 없이 창업 금융을 지원해야 함.

□ 농협은행, 농협보험사 본래 목적대로 환원 운영

농민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농민을 위한 운영 체제로, 수산업에 위한 조합은 수산업과 어민을 위한 조합으로 제대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법과 규정을 강화함.

□ 지역밀착 서민금융 역할 강화

서민 및 중소기업에 위한 본래 목적을 달성화 하지 못하고 부실화 되어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음.

하지만 지역 서민금융은 은행에 비해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 받고 조합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것

이 원칙임.

□ 금융협동조합 세제지원 강화

협동조합 금융예금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함. 1.5% 농특세만 부과하는 것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금융기관 세제지원을 강화함.

미국과 독일은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저율과세(일 2/3)하고 있음.

조합원의 이익배당금은 소득세를 면세 또는 저율과세하고, 인지세, 재산세, 사업세 등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함.

2-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활성화 금융지원

중소, 영세, 소비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함.

손쉽게 소규모 창업 금융 조달(신용 및 사업체 담보) 가능토록하고, 담보가 없어도 창업 금융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금융사업 허가

현재 법으로 금융과 보험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자체적 금융사업을 전면 허용하여 조합원 상호부조 사업, 대여제도, 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에 자체적 금융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소비자가 뭉쳐 공급자와 대응하여 실천적 소비생활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함.

□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협동조합의 설립만 장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조합의 창업이 되도록 창업단계부터 코칭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전파함.

3 중소서민, 소비자권의 확대

3-1. 영세사업자 및 중소서민 소비자 금융지원 강화

□ 서민금융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과 자금지원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중소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의 본래 설립목적으로 전환시킴.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여 영세금융 지원과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행 역시 본래 설립목적으로 전환시킴.

□ 신보와 기보 통합, 역할 재정립

유사한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므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신보와 기보를 통합시켜 역할을 재정립 시켜 효율화를 기함

□ 중소기업자 직접금융 자금조달 지원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최종적인 자금수요자(기업)가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채권 등을 발행함으로써 자금공급자(개인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일로, 직접금융은 대개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기업이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해 이루어짐.

대개 기업은 이자부담 등의 이유로 직접금융을 선호하게 된다. 즉, 주식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후 사업이 잘 되면 이익만큼의 배당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 벤처캐피털 확대

198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잠재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한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임.

3-2. 중소기업 소비자 신용회복 지원

□ 금융배제자 금융포용 정책 추진

현재 제도권금융이 ‘퇴짜’를 놓은 금융배제자가 무려 721만명, 성인 5명 중 1명 꼴이나 된다. 성인 564만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음

여기에 사실상 금융이용이 어려운 7등급 157만명을 더하면 전체의 20.8%인 721만명이 금융배제자 처지에 놓여 있음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활동을 재기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는 98만2579명임.

우리나라는 1843만5876명(중복 인원 포함 시 4769만714명·7월 31일 기준)이 총 1323조1268억원의 대출을 받았음

대출 금액은 개인 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이중 98만2579명(5.3%)이 3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채무 불이행자로서 신용불량자임.

□ 개인회생, 파산제도 효율적 개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중소서민 부채탕감 정책 시행

빚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조정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3-3. 금융소비자 권익증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원인은 복잡다난 할 것임. '정보의 비대칭성, 불공정한 약관, 금융사의 불공정한 거래,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 금융감독 당국의 업계 편향적 정책' 등으로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그 만큼 어렵고 복잡할 것이나, '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의 설립, 소비자권익 3법의 제정, 금융옴브즈맨제도의 도입, 금융소비자단체의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

직접적인 소비자관련법은 공정위가 그나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함. 그러나, 나머지 관련법들은 정부부처가 법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의견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부처간 이견이나 의견을 조율하거나 소비자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은 없으므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함.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를 가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각부처간 정책조율 목적으로 형식상 만들어 놓은 공정위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 조직으로 설치하고 한국소비자원을 소비자청으로 만들어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시키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금융소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 피해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금융시장의 불법모집, 불완전판매, 부당한 약관변경,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기능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한지붕 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는 항상 2선으로 뒤쳐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전담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함.

현재의 정부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나 효율성과 기구조직 측면에서 필자가 제안한 소비자정책위원회산하의 한국소비자청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를 통합시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권의 3법 제정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피해액은 적지만 피해소비자들은 대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적은 금액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모든 정보를 공급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도 거의 불가능함.

더구나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송이 끝날 때 썸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것은 바로, 소비

자권의 3법이 없기 때문임.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대량 피해를 입혀도, 손해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하고, 피해보상도 손해를 본 것 만큼만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이득에 비교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임.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임.

◆ 집단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피해는 전체 소비자 피해금액은 엄청나지만, 피해자 개인당 피해금액은 소액인 특징을 갖고 있음.

개인 소비자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송비용이 받을 금액보다 더 들어가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임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치므로, 이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임.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음.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개개인이 소송해서 보상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하는 단체소송제도 역시 확대 도입해야 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어,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 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됨.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금융소비자 개개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노력, 금전을 모두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도로 정하려는 추세이지만 이 정도로는 미약하다. 10배 이상 까지 손해배상금을 늘려 소비자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지만 금융사 스스로가 사전에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하게 됨.

◆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거증책임(舉證責任) 또는 증명책임(證明責任)이라고도 함.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패소의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 책임이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소송재판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며, 피해를 당한 쪽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한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함.

원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해소송, 의료소송 등의 경우, 피해소비자가 공급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추세임.

금융소비자 피해의 경우도 의료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함.

현재 공동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임.

모든 정보를 금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이를 획득해 법원에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사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옴부즈맨 제도 도입

우리나라 금융피해자들이 보상받으려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길 뿐이 없음.

금융감독원도, 한국소비자원도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조정만 할 뿐이고 이마저도 금융사들이 거부하면 그만임.

EU(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정기구인 옴부즈맨을 EU회원국에 국가의 형편에 따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일정 시한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EU회원국들은 소비자와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비자옴부즈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독일의 보험옴부즈맨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거래 상

대방인 보험사가 스스로 나서서 이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는 것과 이러한 기구가 잡음없이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임

EU에서의 소비자보호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 사업자 단체의 구체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권리의식이 결합해 이루어낸 실체적 산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소비자 개념의 유연성에서 비롯되며, 분명히 소비자란 누구인가를 정하는 시각이 우리와는 다름

금융소비자는 협상 능력 면에서나 경험적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실에서 EU집행부는 많은 정책 중에서도 소비자보호 정책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금융소비자 옴부즈맨은 금융분쟁에 있어서 하나의 조정기구로서 해당영역에서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금융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관련자가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게 됨.

즉 소비자의 만족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며,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결국 공동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소비자보호에 현실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기업의 소비자보호의식은 EU 시장에서 불변의 실천규범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임

이 같은 유럽의 소비시장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옴부즈맨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넘쳐나는 법원의 금융분쟁 소송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후적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피해자 동일적용, 사전적 소비자 문제해결 등 폭넓은 해결이 가능함.

당연히 상사중재원 또는 공정거래위의 결정과 같이 1심의 판결 효력을 갖

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단체 운영 지원 강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발전하고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은 주로 기업의 수출규모나 GDP 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경제성장의 논리에 근거하여 그동안은 소비자 권리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그 희생을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우선시 되어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듯이 소비자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함

국민의 생활의 질을 고려하고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열망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전국민이 소비자이지만 개별소비자 스스로는 소비자권익을 외칠 수도, 피해를 입은 권리를 찾기도 쉽지 않음.

그래서 힘을 가진 공급자와 대응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왕성해야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는 형세 빈한하기 그지 없음.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은 몇 푼 안 되는 정부보조금에 익숙해져 있어 정부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관변단체 수준에 머물거나, 의욕은 충만한데 부족한 자원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소비자단체들이 정부와 기업눈치 안보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함.

현재의 정부가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권익증진 활동 실적에 따라 소비자들이 납입하는 소득세의 1%를 직접 지원하는 1%법을 제

정하던지, 공급자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부담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공급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정부가 모조리 빼앗아 가는 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과징금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줘야 함.

- 이상 -

참고자료-정의당 금융공약집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서민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

- 1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
- 2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및 담보대출 개선
- 3 연대보증 개선과 시민단체 채무 대리인 선임 가능
- 4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
- 5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역금융 활성화”

- 6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사모·헤지 펀드 규제 강화
- 8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1.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

진단

- 최고 금리가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 연 27.9%, 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 연 25%로 너무 높음

[외국의 이자 규제 사례]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 상한으로 규제

-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무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동 비용을 포함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됨

약속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동일하게 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이자에 포함
-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이자총액제한법」)

2.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및 담보대출 개선

진단

-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부업체 등으로 바뀌면서 부당한 추심에 노출됨
-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소멸시효 채권의 거래가 금지되었으나,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일부 상환 시 시효가 되살아남
- 채무자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연체되는 경우에도 담보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채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이후에도 미회수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동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약속

-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 금지 법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활 금지 법제화
- 소멸시효 이전의 채권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명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대출 표준약관과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
- 담보대출의 이자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권 실행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화

3. 연대보증 개선과 시민단체 채무 대리인 선임 가능

진단

- 연대보증은 금융위원회의 지침으로 2012년 은행, 2013년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나, 대부업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의 경우 금지되지 않아 여전히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
-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을 선임할 수 있으나 금전적 부담으로 서민층이 이용하기 어려움
-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업자 등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와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예외임

약속

-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 연대보증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과태료 부과(「대부업법」 개정)
- 채무자 대리인으로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채권추심법」 개정)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금지(「채권추심법」 개정)

4.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

진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은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자,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6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고, 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만 감면함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에 대하여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 최대 60%(취약계층 90%) 감면함

약속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연체기간, 소득 조건을 완화하여 소액채무자는 누구나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70%(취약계층 100%)로 감면률 확대
-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자에 포함시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잔여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5.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진단

- 채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가능하도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는 중지명령제가 있으나 파산절차에는 없어 채권자의 압류를 방지할 수 없고 압류금지 생계비가 1개월에 불과한데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는 면책대상채권에서 제외함
- 개인파산 면제재산 보증금 액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보다 적은 금액(서울 3,400만원)에 불과함

약속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으로 변경(「채무자회생법」 개정)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채무자회생법」 개정)
- 압류금지 생계비를 1개월간에서 6개월간으로 변경(「민사집행법」 개정)
- 압류금지 물건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명시적으로 포함(「민사집행법」 개정)
-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채권의 범위에 포함(「채무자회생법」 개정)
- 보증금 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보호받는 금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현행 대도시 5,400만원) 수준으로 면제재산 인상(「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6.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진단

-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해당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저금리 부채였다가 고금리 부채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불완전판매, 약탈적 대출, 약관을 위반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을 우선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약속

-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2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사적 및 공적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 신용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행위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사모·헤지 펀드 규제 강화

진단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에 노동자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없음
-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킴
-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는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감독집행 기능은 민간감독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 공모펀드는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약속

-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기관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시 단독조사를 허용하고,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기구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폐지
 - 차입한도, 파생상품 거래 한도 등
- 역외 소재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 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영향 심의 및 허가제 시행

8.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진단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등은 “돈 가뭄” 현상을 보임
- 현재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광주, 제주 6개 지방은행이 있으며, 강원권, 충청권(대전), 경기권(인천)에는 없음

약속

- (가칭)「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농협, 우체국, 금융공기업 등에 우선 시행(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신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 참조)
 -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의무 부과
-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 이사회에 중소기업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 광역시도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